

일본과 동북아 안보

- 3 <권두논문>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와 동북아 안보환경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 7 한일관계의 구조변화와 일본의 '국가보수주의'
신정화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 23 세계 군축비확산 동향과 동아시아의 과제
고봉준 (충남대학교 교수)

한일관계의 구조변화와 일본의 ‘국가보수주의’

신정화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국제체제, 동북아체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체제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져 왔다. 1965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반공연대에 기초한 경제협력이 중시되었던 ‘우호·협력기’로,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는 역사·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대립이 확대되고 있는 ‘갈등 증폭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2000년대에 들어와 급격히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국가보수주의이다. 국가보수주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정치적 반자유주의로 구성되며, 중심세력은 보수 정치가와 경제계, 보수 지식인에 의해 구성된 신우파연합이다. 특히 현재의 아베 정권은 아베 개인의 극우 수정주의자적 특성이 반영되어, 침략역사의 부인, 군사 대국화 등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반자유주의’를 급격히 추진하고 있다.

세계 군축비확산 동향과 동아시아의 과제

고봉준 (충남대학교 교수)

21세기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군축비확산은 일반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방어력을 확충하거나 가상 적국의 군사력 사용을 억지하는 군비증강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국가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 것이 핵심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재의 군축비확산 노력은 주로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위협요인의 감소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분야도 있다.

하지만, 세계적 차원에서는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 권력정치 측면이 재부상하고 있고,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해양영토분쟁과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적 행동 등 갈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관련 국가의 국내정치적 요인이 부정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중단기적으로 군축비확산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1세기 군축비확산이 미국의 전략과 정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와 한국은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군축비확산과 관련하여 복합적 세부 이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안보상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이슈를 선점하여 주도하는 네트워크를 하는 한편,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군축비확산 이슈의 복합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단/중/장기적 대응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양성과 활발한 토론을 통한 이슈의 복합적 인식과 관련 부처의 효율적인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

〈권두논문〉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와 동북아 안보환경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탈냉전 이후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은 독자적인 방위력의 확충과 국제적 안보 역할의 확대, 그리고 미일안보조약의 재정의를 통한 미일동맹의 재편·강화를 추구해 왔다. 일본 본토의 소극적 방위에 한정했던 1976년의 ‘방위계획대강(防衛計画の大綱)’, 주변지역의 방위로 확장을 시도한 1995년의 대강, 국제안보환경의 개선 등 글로벌 차원의 역할 확대를 추구한 2004년의 대강, 그리고 일본 열도의 남서방면의 방위력 강화를 강조한 2010년의 대강을 거치면서 일본 방위정책의 관심대상이 일본 본토에서 주변지역 그리고 국제무대로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 방위전략의 근간이었던 ‘전수방위(專守防衛)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전수방위란 외부의 공격을 받은 후에 군사력을 행사하며, 그 정도는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고, 상대국에 대한 선제공격이나 전략공격을 금지하며, ‘미즈기와(水際)’ 즉, 자국 영토 혹은 주변에서만 작전하며, 상대국의 침공이 있을 때마다 격퇴한다는 것으로 지극히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군사전략이다. 따라서 무기체계에 있어서도 ‘기반적(基盤的) 방위력’ 즉, 자위(自衛)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력의 보유에 한정되며, 탄도 미사일, 장거리 전략폭격기, 미사일 탑재 원자력잠수함, 항공모함 등 공격형 무기의 보유는 금지되었다.

전후 일본의 방위전략이 일본 본토의 소극적 방위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평화헌법’이 있다. 연합국의 점령 하에서 제정된 일본 헌법은 전력불보유(戰力不保持)와 교전권부인(交戰權否認)을 명시하고 있는바, 공식적으로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미소냉전 하에서 미일동맹체제에 편입된 일본은 소련으로부터의 침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평화헌법의 이념과 본토 방위의 필요성이라는 현실 사이의 타협이 바로 전수방위 원칙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탈냉전과 21세기 국제안보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일본의 방위계획대강은 방위정책의 기본 목표로서 일본에 대한 위협 방지 외에 국제적 안보환경의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및 동맹국과의 연대행동을 추가

함으로써, 자위대의 임무를 일본 방위 및 주변지역 활동을 넘어 국제무대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일본 방위, 재해에 대한 대응, 미군과의 협력, 그리고 국제평화협력활동 등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방위력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MD 및 정찰위성의 운용과 정보수집·분석 능력 강화, 공중급유기, 대형 수송함·호위함, 신형 수송기 등의 장거리 투사 능력의 확충 등 예방적, 적극적 대응이 가능한 방위력의 확충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북한 위협론’과 ‘중국 위협론’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위한 논리적, 실제적 근거를 제공하여 왔다. 1993년 노동 미사일 발사는 일본에서 북한을 실제적 안보위협으로 인식시킨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 정부는 당시 반대여론으로 인해 도입이 불투명하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및 4기의 정찰위성 도입을 결정하였고, 5척의 이지스함과 4대의 공중급유기를 실전배치할 수 있었다.

2010년과 2012년에 발생한 다오위다오(釣魚島)/센카쿠(尖閣) 열도 사건을 계기로 일중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고,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 ‘중국 위협론’이 크게 확산되었다. 2010년의 방위대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동중국해 등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응한 남서방면의 방위력 강화이다. 즉, 가고시마(鹿兒島)에서 오키나와에 이르는 남서제도(南西諸島)에서의 육상자위대 주둔과 해상·항공 자위대 수송력 증강 등을 통해 도서 방위에 필요한 ‘동적(動的) 방위력’을 강화하여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3년 말에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채택할 예정인데, 최근 이에 대한 자민당 안(案)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능력을 감안하여 자위대에 의한 적기지공격능력(敵基地攻撃能力)의 보유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남서방면의 방위를 위해 육상자위대에 해병대의 기능을 부여하여 수륙양용부대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공격능력을 갖지 않고 방어에만 전념하겠다는 전수방위원칙과 모순된다.

한편 미일동맹에 있어서도 냉전기의 미일안보체제가 일본 방위와 주변지역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일본에 의한 기지 제공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면, 냉전 이후에는 주변사태 및 글로벌 차원의 안보환경 개선을 위한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종래에는 소련에 의한 일본 본토 공격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주된 역할과 일본의 보조적인 역할이 규정되었던 데 반해, 21세기에는 테러, 핵 확

산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등장이라는 안보환경에 맞추어 미일동맹은 재편되었고, 일본 본토 방위에 있어서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이 역전되었다.

일본은 독자적 방위력의 정비, 헌법개정(혹은 헌법해석의 변경)을 통한 자위대의 군대화 및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확보와 함께,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재개정을 통해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과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미일 간 역할분담의 재조정 및 병력운용의 통합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 양국은 미일 간 공동훈련·연습의 확대, 시설의 공동 사용, 정보 공유 및 공동의 정보 수집·정찰 활동의 확대는 물론 호주, 한국, 인도 등과의 안보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일본은 냉전기의 비무장 경제중심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위안보정책에서 탈피하여 한편으로는 미일동맹의 재정을 통해 미군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방위력을 확충하고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군사·안보 역할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군사적 보통국가화’로 정의할 수 있다. 일본은 이제 전후의 평화헌법체제나 ‘요시다 독트린’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정치·군사적 의미에서의 정상적인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일본의 국가노선으로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는 미일동맹의 유지를 전제로 한 보통국가론인바, 이의 실현을 위한 군사적 보통국가화 작업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의 미일동맹의 강화 추세를 보전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전략의 핵심을 구성하는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 핵·미사일 사태로 지역 안보질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으로서도 미일동맹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는 많지 않다.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는 동아시아 안보질서와 관련하여 이중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지역안보에 대한 일본의 건설적 역할 확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시야에 넣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은 냉전 이후 경제력과 군사력을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중국이 지역질서를 혼란시키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중요한 세력이 될 수 있다. 반면 최근의 일본 방위안보정책의 방향은 미일안보협력의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로 향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 내 군비경쟁과 패권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우선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비해 한미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헌법 개정과 집단적자위권 문제 등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주권 사항이며, 이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선택한 일본에 대항하여 한국이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미일안보체제는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일동맹의 대일 견제적 성격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한일 간 전략대화 및 안보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일본에 의한 대미(對美) 후방지원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한일 간 안보 관련 대화채널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대중(對中)관계 설정 및 대북정책에 나타난 한일의 입장 차이는 양국의 전략적 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바, 이에 대한 한일 간의 인식 공유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층적인 다자협력체제를 통한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의 균형 잡힌 외교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자관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복수의 다자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평화로운 지역질서 유지에 건설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한중일 3국 간 안보 협력 외에 한미일, 한미중 및 한중러 전략대화를 병행해서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저자 약력

■ 조양현

現 국립외교원 교수.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함. 일본 정치외교, 한일관계, 동아시아 지역주의, 아시아태평양 국제관계 및 외교사가 주요 연구분야이며, 저서로는 『아시아地域主義とアメリカ』(2009),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1』(2010, 공저), 『일본과 동아시아』(2011, 공저), 『현대외교정책론(제2판)』(2012, 공저) 외 다수가 있음.

한일관계의 구조변화와 일본의 '국가보수주의'

목 차

신정화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1. 문제제기

- 2013년 10월 현재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태임.
 - 2월 25일 취임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첫 대외외교인 아소 다로(麻生 太郎) 부총리 겸 재무대신과의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등 역사와 영토문제를 무시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함. 또 3·1절 기념사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의 우경화를 감안해 독도,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역사 및 영유권 문제를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 1월 출범한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 晋三) 내각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 역사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음. 이에 더해 아베 수상은 9월 26일 유엔(UN) 총회 연설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란 깃발 아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아시아와 세계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힘.
 - 역사 문제와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대립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수상 간의 정상회담이 아직도 개최되지 않고 있음.
- 역사 문제 및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과의 대립은 냉전 붕괴 후인 1990년대에 들어와 표면화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이후 격화일로에 놓여 있음.
 - 주요 원인은 냉전의 붕괴와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급속한 확대에 의해 국제관계의 존재 양식과 국가의 행동방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임.
 - 일본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중국의 경제·군사대국화라는 전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환경 속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추진을 통한 글로벌 자본의 경제력 확보와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수·우익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한국의 경우도 8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를 배경으로 강화되기 시작한 민족적 자부심이 일본의 국가보수주의에 의해 자극받는

1. 문제제기

2. 한일관계의 변화

가. 우호·협력기: 65년

체제 안에서

나. 갈등격화기: 65년

체제를 넘어서

3. 일본의 국가보수주의

가. 발생 배경

나. 추진 세력과

주요 내용

다. 전개 과정

4. 향후 전망과 한국의 대응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부터 1998년
‘21세기 한일
신파트너십’
발표시기까지의
한일관계로
기본적으로
반공연대에 근거해
우호·협력이
대립·갈등보다
우선시된 시기임

형태로 표출되고 있음.

- 한일관계는 우호와 협조 측면보다는 갈등과 대립 측면이 두드러지게 됨.

- 본 발제문은 2000년대 이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의 특징을 국제체제, 동북아시아체제, 한일정치경제의 변화와의 관련 하에 검토하고,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보수·우익화를 국가보수주의의 틀에 입각해 제시하고자 함.

2. 한일관계의 변화

- 1965년 국교수립 이후 한일관계는 국제체제, 동북아체제,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체제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호·협력과 대립·갈등이 지속적으로 교차하는 양면성(ambivalence)을 띠면서 전개되어 옴.
- 1965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의 약 반세기 동안의 한일관계는 크게 다음의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 첫 번째 시기는 1965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의 기간으로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보다는 반공연대에 기초한 경제협력이 중시되었던 ‘우호·협력기’임.
 - 두 번째 시기는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잠복하여 온 역사·영토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상반된 인식과 입장의 차이가 표면화함으로써 우호·협력보다 갈등·대립이 확대되고 있는 ‘갈등 증폭기’임.

가. 우호·협력기: 65년 체제 안에서

-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부터 1998년 ‘21세기 한일 신파트너십’ 발표 시기까지의 한일관계로 기본적으로 반공연대에 근거해 우호·협력이 대립·갈등보다 우선시된 시기임.
 - 국제차원의 냉전체제 하, 미국은 소련과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반공 전선국가)과 일본(반공 후방기지국)의 적극적인 연계를 필요로 함. 이 결과, 한·미·일(남방 삼각관계) 대 북·중·소(북방 삼각관계)의 대립구조가 성립함. 한일관계는 양국 간 현안보다는 ‘진영 간 대립 속의 3국 간 상호관계’가 우선되는 가운데 전개됨.
 - 한국의 경우는 권위주의체제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과 문민정권인 김영삼 정권에 해당하며, 경제성장 지상주의에 입각해 민주주의의 일정 부분을 제한하면서 북한에 대한 우위 확보를 국가전략으로 채택했음. 이와 같은 국가전략을 실현하는 데 있어 일본의 경제적

지원은 긴요했음.

- 일본의 경우는 보수정치세력인 자민당 1과 혁신정치세력인 사회당 1/2의 대립 구조로 이루어지는 ‘55년 체제’로, 요시다 노선(안보는 미국에 의존, 경무장, 경제발전)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했음. 이를 통해 ‘냉전의 국내화’를 차단하고,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달성할 수 있었음.
- 양국 간의 경제규모나 발전 단계의 차이로 인해 한국이 일본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였음. 일본은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직결된다는 ‘부산적기론’에 기초하여, 한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행했음.
- 한국과 일본은 국가전략 및 정치체제의 차이, 그리고 대북정책과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때로 대립하였으나, 반공연대를 우선시한 양국의 보수주의 정권에 의해 우호·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 그를 상징하는 것이 한일의원연맹임.

○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특징

- 아시아에서의 대공산권 봉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 미국의 알선에 의해 1965년 한국과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함.
- 한국의 박정희 정권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보다 정권의 정통성 확보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추진한 경제발전에 대한 일본의 지원을 중시했음.
- 일본은 패전에서 부활한 동아시아 경제 강국으로서 미국이 추진하는 대공산권 봉쇄정책에의 기여 및 일본 자본의 시장 확보라는 관점에서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함. 일본은 경제 원조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한반도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과 불가피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함.
-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과 일본은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긴밀한 협력과 상호의존 구조를 형성 발전시켜 옴.
-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무시할 수 없었으며, 일본 역시 한국의 존재를 통해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안보적 위협을 상대화할 수 있었음.
- 역사문제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른바, ‘미완의 국교정상화’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역사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표면화할 가능성은 내포되어 있었음.

나. 갈등격화기: 65년 체제를 넘어서

- 2001년 교과서 파동부터 2013년 현재까지 약 10여 년간의 한일관계는 반공연대에 기초한 ‘65년 체제’가 흔들리면서 양국 간 현안인 과거사

*2001년 교과서
파동부터 2013년
현재까지
약 10여 년간의
한일관계는
반공연대에 기초한
‘65년 체제’가
흔들리면서 양국 간
현안인 과거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을 거듭*

일본은 2000년대에

들어와 중국의

해·공군 증강을

'잠정적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중후반에는

중국을 '실질적

위협'으로 표명

문제와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을 거듭해 왔음.

-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그리고 9·11사태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제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정책이 변화함.
 - 냉전의 종결과 함께 소련이 퇴조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이 수정됨. 특히 9·11 사태 이후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미 본토의 테러 및 국제 테러리즘의 방지로 급변하면서, 동북아시아보다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지역을 중시함.
 -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수정은 전후 한일관계의 질적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 동아시아 지역체제 역시 중국의 부상에 따른 G2체제의 성립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이 상징하듯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음.
 - 소련의 퇴조와 함께 대체세력으로 주목받아왔던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경제 성장과 군사력 강화를 이루어 옴. 이 결과 중국은 동아시아 국제체제의 핵심 행위자로 등장하게 됨.
 - 중국의 국방비는 2004년 일본의 국방비를 추월하였으며, 2008년 이후에는 두 배의 격차를 보이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와 함께 2009년부터 '제1열도선'을 넘어 태평양 지역까지 중국 해군의 활동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음.
 - 핵·미사일 문제가 상징하듯 북한 역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자의 일원으로 등장함.
 - 일련의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동, 특히 중국의 대두에 대한 한일 간 인식에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것이 한일관계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변수의 하나로 작용해 왔음.
- 일본의 정치, 외교, 경제에 있어서 구조변화가 발생함.
 - 일본은 70년대에 경제대국의 지위를 획득한 이래 80년대 후반부터는 세계 제일의 채권국가이자 원조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옴. 그러나 1990년대부터 계속되어 온 20여 년간의 경제침체에 의해 그 존재감이 약화됨.
 - 2010년 중국과 일본의 총 GDP 역전이 상징하듯이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의 자리를 중국에 내어주게 됨. 멀게는 1868년 메이지유신 이래 가깝게는 195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일본 우위의 중일관계가 역전되었음.
 - 일본은 2000년대에 들어와 중국의 해·공군 증강을 '잠정적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중후반에는 중국을 '실질적 위협'으로 표명함.
 - 2010년 9월 센카쿠열도 중국어선 충돌사건은 중일 간의 역전된 힘(power)

- 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 2011년 12월 발표된 「2012년 방위대강」은 중국군의 급속한 근대화에 수반하는 활동이 지역·국제사회의 우려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면서, 안전보장의 기본방침을 「기본적 방위구상」에서 「동적 방위력」의 구축으로 변화시켰음. 즉, 일본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 안전보장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 중국의 위협과 북한의 위협을 배경으로 신우파연합은 적극적으로 민족주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역시 확대되고 있음.
 - 영토 문제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이 보수화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과의 대립이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의 변화는 한일관계의 변화를 촉진하는 변수로 작용함.
-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민족적 자존감이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에 따라 향상됨.
- 한국은 80년대 이후의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 그리고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의 승리를 배경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됨.
 - 한국은 냉전 붕괴기 일련의 북방정책을 추진해, 냉전시대 적국이었던 러시아·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함. 이는 북한에 대한 체제 승리라는 인식과 함께 공산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위협인식을 약화시킴.
 - 정치사회적 민주화에 의해 여론이 정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어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권위주의 정치체제 당시처럼 정부가 억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 오히려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정권이 지지율 향상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함.
 - 한국 경제의 발전과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가 맞물리게 된 결과, 양국의 경제관계는 불균등하고 의존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경쟁관계 또는 상호보완의 관계로 변화함. 즉 한국과 일본의 글로벌 자본이 경쟁 관계를 형성하게 됨. 또 한국 경제와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일본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됨. 이 결과, 일본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향상됨.
 -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중국의 강대국화를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한국 으로서는 중국의 존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이 불가결한 국가인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교역국가이기 때문임.
 - 이상과 같은 한국의 변화 역시 한일관계의 변화를 촉진시킨 주요 변수로 작용함.
- 위에서 살펴 본 여러 차원의 요인 변수에 의해 한일관계는 한·미·일

**한국 경제의 발전과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가 맞물리게
된 결과, 양국의
경제관계는
불균등하고 의존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경쟁관계 또는
상호보완의 관계로
변화**

탈냉전과 지구화의**맥락이 정치·군사적****대립구도를****완화시키고 경제적****신자유주의를****심화시키는 가운데****국제관계의 존재****양식과 국가의 행동****방식을 바꾸어 옴**

3국은 물론 중국과 북한을 포함하는 복잡한 다자간 관계, 그리고 양국 간의 현안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차원적 관계로 대체되었으며, 그 결과 성격과 양상이 크게 변화하게 됨.

○ 한일관계의 특징

-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로 인해 양국이 다루어야 할 협력과 갈등의 영역이 양국 관계의 차원을 넘어 지역적,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됨.
- 탈냉전으로 인해 냉전시대 억제되어 왔던 양국 간 현안인 과거사 문제가 일본과 한국의 강화되는 민족주의와 맞물리면서 주요 핵심 쟁점으로 등장하게 됨. 물론 여기에는 ‘일본 정신의 회복’이라는 민족주의 강화 맥락에서 전개되는 일본 수상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종군위안부에 대한 강제성 부인 등이 상징하는 과거사 합리화가 양국 간 갈등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음.
- 냉전체제의 종식에 따라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의 구심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됨. 이 결과 한일 안보관계는 미국을 매개로 한 잠재적 협력·경쟁관계의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탈냉전 후 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자간 세력균형 게임의 한 부분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됨.
-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라는 목표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안보 강화와 군사적 활동 영역의 확대에 대해 한국은 경계심을 풀지 못하고 있음.
- 중국에 대한 인식 및 정책에서의 온도차가 한일 간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음. 한국의 경우는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협력 하에 대중봉쇄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2000년대까지 일본은 한국에 대해 중국위협론을 설 명하면서 대중견제를 위한 연대를 요청했으나, 2013년 현재에는 한국은 중국의 앞잡이며, 일본은 ‘한중연대’에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우익세력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3. 일본의 국가보수주의**가. 발생 배경**

- 탈냉전과 지구화의 맥락이 정치·군사적 대립구도를 완화시키고 경제적 신자유주의를 심화시키는 가운데 국제관계의 존재 양식과 국가의 행동 방식을 바꾸어 옴.

- 신자유주의의 확장에 따라, 그를 위한 환경 조성이 국가의 제일의 임무로 되고 있는 가운데 그를 합리화하기 위해 내셔널리즘이 강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만의 특수현상이 아니라, 한국,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보편적 현상임. 그러나 구체적인 양상은 그 국가가 처해진 대내외적 조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음.
- 우리가 일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관계뿐만 아니라, 충분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전범 국가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여 군사 강국이 되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국 중심으로 행동하리라 전망되기 때문임. 그리고 일본의 군사 강국화는 남북통일, 독도 문제 등의 사안을 갖고 있는 우리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임.
- 역사적으로 ‘경제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와 내셔널리즘을 포함한 ‘정치적 반자유주의’는 빈번히 결합돼 왔음.
 - 오늘날 글로벌화(국경을 초월한 물자, 자본, 노동의 이동)를 주어진 조건, 필연, 또는 경제, 사회, 기술 변화의 자연스러운 귀결로 받아들여, 글로벌화가 국가, 국가가 근거한 제도들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의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방식에 연구가 집중되어져 온 경향이 있음.
 - 글로벌화를 단순히 경제적(비정치적) 활동의 자연스럽고도 자발적인 귀결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함. 왜냐하면 글로벌화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정치적 과정이며, 정치적 귀결을 수반해 왔기 때문임.
 - 내정 면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글로벌기업이 외정 면에서는 반대로 국가의 적극적(필요하다면 군사적)인 관여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이것은 ‘경제적 자유주의’와 내셔널리즘을 포함한 ‘정치적 반자유주의’가 빈번히 결합되어져 왔음을 의미함.
 - 가까운 과거사에서, 글로벌화를 강력히 추진해 왔던 정치지도자들(영국의 대처 수상,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등)이 ‘자유경제와 강한 국가’, 즉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반자유주의의 연합을 주요 권력기반으로 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화가 제국주의적 팽창이라는 전 단계의 글로벌화의 유산에 조건 지어져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됨.

* 경제적 자유주의란 자유무역, 자유시장, 작은 정부, 소비자 선택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를 뜻하며, 정치적 반자유주의는 정부는 국가권위에 반대하는 주장 및 국가권력에 대한 제도적인 억제, 비판, 반대를 약체화하고 배척하려고 의도하는 권위주의적 정치경향을 의미함.

**역사적으로
'경제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와
내셔널리즘을 포함한
'정치적
반자유주의'는
빈번히 결합돼 왔음**

보수파(신우파)**정치엘리트는****신우파연합의****중심세력으로 정치****영역에서****국가보수주의를****추진하고 있음****나. 추진 세력과 주요 내용**

- 1990년 이후 추진되어 오고 있는 일본의 국가보수주의는 우익, 우익성, 우경화, 보수, 보수화, 신보수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음.
 - * 국가보수주의(State Conservatism)란 신자유주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의 권위에 기초해 보수적인 가치질서로 국민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정치적 사상과 그 제도적인 기반을 칭함.
 - *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자유주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의 체제를 견지하면서, 사회복지와 부의 분배의 불평등화 등의 문제 개혁을 주장하는 혁신세력의 주장을 선점해 보수반동으로 추락하는 것을 피하는 동시에 점진적인 정책을 추진해 가는 보수세력의 주의와 정책을 칭함.
- 국가보수주의는 신우파연합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신우파연합은 보수 정치가와 경제계, 보수 지식인에 의해 구성됨.
 - 흡수적인 세계관을 소지하며, 중국과 북한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공산주의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음.
 - 평화헌법에 기초한 일본의 ‘전후민주주의’를 공동의 적으로 하고 있음.
 - 현안에 따라서는 온도차를 보이기도 하지만,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 일본의 실현을 최대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군사정책으로는 현실주의적 안보정책을 선호하고 있음. 따라서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중시함.
- 보수파(신우파) 정치엘리트는 신우파연합의 중심세력으로 정치 영역에서 국가보수주의를 추진하고 있음.
 - 보수 정치엘리트들은 신자유주의화와 관념화된 국가보수주의의 담당자로 정치계·경제계·관료의 보수통치 엘리트 중에서도 지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
 - 전후세대로 미국에서 유학 또는 체류 경험이 있는 2세대 정치가로 여당·자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다수를 점하고 있음.
 - 현실의 국제체제와 미일동맹을 전제로 한 현재의 국제적 맥락 하에서 정치·군사대국 일본을 추구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미일안보동맹의 강화,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등이 상징하는 자위대의 활동 영역의 확대, 그리고 방위청의 방위성으로의 승격 등이 상징하는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이들의 최종 목표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 일본의 수립이며, 그를 위한 국민 통합의 방법으로 도덕 및 교육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음.
 - 가장 대표적 인물은 현재의 수상인 아베 신조(安倍 晋三)를 들 수 있음.
- 경제계는 경제 영역에서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하면서, 보수정치엘리트와 연합해 국가보수주의를 추진하고 있음.
- 경제단체연합회(経団連)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経連)가 중심이 되어 버블경제 붕괴 이후인 90년대 초부터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내걸고 전후의 수출주도형정책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국가와 사회구조를 개혁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유동화를 추진해 옴.
 - 경제계는 정책제언의 발표 등을 통해 정치엘리트들에게 신자유주의의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정치엘리트들이 추진하는 국가보수주의를 적극적으로 견인해 옴.
 - 수상의 자문기구와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신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 기업가, 재계인물로 구성되는 이른바, ‘민간’의 ‘유식자’들을 참여시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옴.
 - 고이즈미 정권 당시 오구다 히로시(奥田 碩) 일본경단련 회장의 지지하에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다케나카 헤이쥬(竹中 平蔵)가 금융·경제재정정책을 담당한 것과 2007년 1월 일본경단련이 발표한 정책 제언 ‘희망의 나라 일본’을 들 수 있음.
- 보수 지식인은 일상 감각으로서의 보수를 창출하고 있음.
- ‘전후체제와 일본 국가의 존재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본의 국가 공동체의 역사적 존재 방식의 재정립과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복구를 추구함.
 - 미국에 의해 이식된 전후체제는 ‘자학사관’에 기초해 일본의 부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까지도 부정했음. 이 결과 일본인들은 주체성·가치관·혼(魂)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일본 국가는 ‘국가로서의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됨. 90년 이후 일본사회의 문제와 국제사회에서 존재감 상실은 전후 ‘평화체제’의 결과임.
 -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일본이 다시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이라는 ‘국가’ 상을 근본부터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국가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식이 필요하며, 국가의식은 애국심에서 시작하고 애국심은 도덕에 기초함.
 - 국체와 천황제의 강조를 통해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자유주의 사관에 입각한 역사 재서술을 통해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히노마루(日の丸)와 기미가요(君が代)의 국기·국가 제정을 통해 애국심을 고양시켜 옴.

**일본이라는
‘국가’ 상을
근본부터
재구축할…
국가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식이
필요하며, 국가의식은
애국심에서 시작하고
애국심은 도덕에
기초함**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재계를 중심으로

일본의 글로벌 자본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신자유주의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협의

-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있고, 대표적인 활동가는 경제학자이며 사상가인 사이키 케이시(佐伯 啓思)가 있음.

다. 전개 과정

- 일본은 ‘후발 공업국’으로서 국제 정치·경제질서에 편입된 결과, 메이지유신을 주도한 신국가 엘리트들이 서구에서 발생한 ‘근대’와 재창출된 ‘전통’의 특권적인 조정자로서 권력의 중심을 독점해 온 국가보수주의의 역사가 존재함.
- 1980년대 초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 康弘) 정권은, 영국의 대처 정권과 미국의 레이건 정권과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국제 책임’을 수행하는 ‘국제 국가’로서 일본을 상징하고, 이를 위한 ‘전후정치의 총결산’ 즉 전후체제의 종언을 주창함.
 - 행정개혁과 민영화를 통해서는 작은 정부를, 미일안보동맹의 강화와 방위비의 증액을 통해서는 군사력 강화를 시도함.
 -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의 법제화 및 교육기본법의 제정 등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 후 미국의 점령에 의해 말살된 일본인의 혼을 재생시키고자 함.
 - 진보자치제의 해체에 성공함으로써, 국가보수주의의 확대에 필요한 정치적 토양을 마련함.
- 세계적 차원의 글로벌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재계를 중심으로 일본의 글로벌 자본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신자유주의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 90년대 초 호소가와 모리히로(細川 護熙), 하타 쓰도무(羽田 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 富市) 정권 등 ‘55년 체제’ 붕괴 후 성립된 연립정권 하에서 신자유주의개혁은 기존 국가 체제를 재편하기 위한 ‘정치개혁’에서부터 추진됨. 정치개혁의 목표는 신자유주의개혁 추진에 있어 정치적 방해물인 사회당과 기존 자민당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었음.
 - 1996년 중의원 선거제도로 기존의 중선거구제를 대신해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가 채용됨으로써 진보세력인 사회당이 소수 야당으로 전락하고 보수양당제 수립을 위한 조건이 수립됨. 특히 보수양당제는 내정뿐만 아니라, 외교에 있어서의 신자유주의개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취함. 이로써 자민당이 본격적인 자유주의개혁을 실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1996년 하시모토 유타로(橋本 龍太郎) 자민당 정권은 ‘구조개혁’을 내걸고

신자유주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함. 하시모토 정권이 추진한 ‘행정개혁’, ‘재정구조개혁’, ‘경제구조개혁’, ‘금융시스템개혁’, ‘사회보장구조개혁’, ‘교육개혁’으로 이루어지는 6대 개혁은 모두 자본의 부담경감과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이었음.

- 2000년대에 등장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 純一郎) 정권과 아베 신조(安倍 晋三) 정권은 신자유주의와 신국가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함.
 - 고이즈미 정권이 보다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에 전념했다고 한다면, 아베 정권은 대내외적으로 보다 더 ‘정치적 반자유주의’의 확장에 전념하고 있음.
- 2001년 4월 수상에 취임한 고이즈미는 정치이념으로서 신자유주의를 특화해 경제계와 대도시 상층부를 강력한 지지기반으로 확보함.
 - 신자유주의개혁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자민당 정권 하에서의 분권적, 하의 상달(bottom up) 방식의 정책결정시스템을 ‘관저주도’, ‘수상주도’의 명분 하에 소수의 집행부에 결정권이 집중되는 시스템으로 변경시킴.
 - 우정민영화(郵政民營化)를 시작으로 하는 일련의 공공부분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민간에 거대한 시장을 제공하고, 은행의 불량채권처리를 강행하여 다국적 기업 본위로 산업구조를 재편함.
 - 전후 4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던 ‘전 국민의 중산층’을 지탱해 왔던 사회안전망이 소멸함. ‘격차사회’, ‘워킹푸어’가 일반화되고, 범죄의 증가와 가족의 붕괴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해 일본사회의 안정이 붕괴됨.
 - 북한의 납치문제와 중국위협론을 활용한 대국적 내셔널리즘을 고양시킴.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자위대의 이라크에의 파병을 행했으며, 2004년에는 ‘유사법제’를 제정하여 전시대비법 체계를 완비하는 등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가능케 함.
- 2006년 9월 수상에 취임한 아베 신조(安倍 晋三)는 고이즈미 정권이 수행해 온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아베 개인의 극우수정주의자적 특성을 반영해 일본의 침략역사 부인, 군사대국화 등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반자유주의’를 급격히 추진하고 있음.
 - 아베는 자민당 내에서도 특이한 존재임. 부친 아베 타로의 힘으로 1993년 8월 자민당 의원으로 당선한 이후 아베는 당내 유수의 극우수정주의자로 행동해 옴. 자민당 내 우파 의원들에 의해 결성된 ‘역사·검토위원회’의 위원, ‘중전 50주년 국회의원 연맹’, ‘밝은 일본 국회의원 모임’, ‘일본의 전도(前途)와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 등의 선두 멤버로 활약해 옴.

*2001년 4월 수상에
취임한 고이즈미는
정치이념으로서
신자유주의를 특화해
경제계와 대도시
상층부를 강력한
지지기반으로 확보함.
2006년 9월 수상에
취임한 아베 신조
(安倍 晋三)는
아베 개인의
극우수정주의자적
특성을 반영해 일본의
침략역사 부인,
군사대국화 등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반자유주의’를
급격히 추진*

제1차 아베 신조 내각

(2006. 09. 26~

2008. 08. 27)은

‘전후체제로부터의**탈각’과 이를 통한****‘아름다운 나라****(美しい国)’ 일본****건설을 주장함.****제2차 아베 신조 내각**

(2012. 12. 25~

현재)은 ‘평화창조**국가’ 일본 건설을****주장**

- 국회의원 시절, 아베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며, 자존 자위전쟁이며, 아시아 해방전쟁이었으며, 난징대학살, 종군위안부는 꾸며내진 것으로 일본은 아무런 책임도 없음. 그리고 일본의 교과서 기술은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옴.
- 2002년 9월의 제1차 북일정상회담에서 납치자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 대중적 정치가로서의 존재감을 확보함.

○ 제1차 아베 신조 내각(2006.09.26~2008.08.27)은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과 이를 통한 ‘아름다운 나라(美しい国)’ 일본 건설을 주장함.

- 아베는 제90대 총리에, 전후 최연소 수상이자 전후 출생한 최초의 수상으로 취임함.
- 제1차 아베 내각은 전후 일본사회를 규정해 온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을 만들고자 시도함.
- 이를 위한 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아베는 ‘교육계의 평화헌법’이라고 불렸던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자위대 관련법을 개정하여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킴. 또 개헌을 위한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킴. 이를 통해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제도적 초석 구축에 성공함.

○ 제2차 아베 신조 내각(2012.12.25~현재)은 ‘평화창조국가’ 일본 건설을 주장하고 있음.

- 2012년 12월 수상의 자리에 복귀한 아베는 역사부분과 군사부분의 두 측면에서 국가보수주의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음.
- 역사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1982년 8월의 ‘미야자와 담화(근린제국조항)’, 1994년 ‘위안부 관련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고노 담화)’, 그리고 1995년 ‘무라야마 담화’로 상징되는 역대 내각의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부정하고 있음.
- 군사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보통국가’ 일본, 즉 전후 평화헌법에 따라 ‘평화국가’의 전통을 지켜온 일본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국가로 진화해 나가야 할 것(수동적 평화주의 → 능동적인 평화주의)을 주장하고 있음.
- 아베 내각의 동북아정세에 대한 인식은 미중 역학구도가 변화할 가능성은 있으나,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는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 및 재정부담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해 일본의 약체화가 진행될 것이며, 이 결과 대외적 영향력의 축소되어 일본의 국익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아베 정권의 대외정책은 미일동맹의 강화+대중관계에 있어서의 견제 유지+강경한 대북정책 지속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방위정책은 적절한 방위력+미국의 동맹국을 비롯한 지역국가들과의 안보협력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이루어질 것임.
- 아베 내각의 군사력 강화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핵무장 가능성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임.
 - 핵무장 가능성은 2012년 6월 20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에서 “원자력이 안보에도 기여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부상되었음. 동 문구가 일본의 핵무장을 가능케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일본이 ‘비핵 3원칙’을 변경하여 당장 핵무장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향후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는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음.
 - 집단적 자위권이란 유엔 헌장상 각국에 인정되고 있는 권리로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동맹 국가를 지원하여 제3국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무력행사를 가능하도록 한 권리임.
 - 원칙상 유엔에 가입한 일본도 유엔 헌장 상 보장된 ‘집단적 자위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
 - 헌법 제9조 1항 ‘전쟁 포기’ 조항은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포기하고 있음.
 - 일본은 유엔 회원국의 지위로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받지만, 헌법상 규정으로는 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됨.
 - 2012년 7월 국가전략회의 평화분과회의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매력적인 안보협력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하며, 헌법 해석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013년 10월 21일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국가안전보장 전략’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방향을 정했음. 아베 내각은 내년인 2014년 4월 국가안전보장법을 통과시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위해 헌법해석의 변경을 할 방침임.
 -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임. 둘째,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군사 활동을 행함. 셋째, 자국의 안보 불안의 해소 및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임.
 - 아베 정권은 지난 10월 2일 동경에서 개최된 미일 2+2회담에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함.

**아베 내각의 군사력
강화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핵무장
가능성과 자위권
행사임**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한국·중국의 대립과 갈등은 2008년부터 정례적으로 이루어져 온 한·중·일 정상회담의 개최는 물론 한·일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의 개최까지를 지연시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과 경제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과거사 문제, 현안인 종군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이 제기된 강제징용 보상 문제에 관해서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정책을 구사

4. 향후 전망과 한국의 대응

-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대를 배경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국가보수주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와 공동번영의 추구에 심각한 장애가 될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군비경쟁의 악순환과 지역패권의 대결구조로 빠트리게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한국·중국의 대립과 갈등은 2008년부터 정례적으로 이루어져 온 한·중·일 정상회담의 개최는 물론 한·일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의 개최까지를 지연시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과 경제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에도 균열을 초래할 것임.
 - 센카쿠열도 문제로 대표되는 영토를 둘러싼 중일 간의 갈등은 군사적 충돌로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
- 국제사회에 있어서 경제적 신자유주의가 계속되는 한, 또 동북아시아에서의 중일의 지위가 재역전되지 않는 한, 일본의 국가보수주의화는 계속될 것임. 그러나 한국이 주도적으로 일본의 국가보수주의화를 저지할 방법은 없음. 다만 다음과 같은 대응이 국가보수주의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과거사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은 단기적인 차원의 대응이나 일시적인 대책으로 해결될 성질의 사안이 아님.
 - 과거사 문제, 현안인 종군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이 제기된 강제징용 보상 문제에 관해서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정책을 구사해야 함.
 -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김영삼 정부 시기의 종군위안부에 대해 경제적 지원은 한국 정부가 행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정신적 피해와 관련한 진정만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증폭을 억제할 수 있는 한일 주요 정치가들의 모임이 구성되어야 함.
 - 한일 양국의 정부와 재계는 역사인식·영토분쟁·이익추구라는 기존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민 교류의 확대를 통해 보편적, 시민적 가치에 입각한 공동의 이해와 합의를 찾는 것이 필요함.

- 군사력 강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일본에 대한 인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즉 일본은 한국에게 있어 '전략적 협력대상'인가, 아니면 '잠재적 위협국가'인가? 이에 대한 인식이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통일될 때,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대한 일관된 대응이 가능할 것임.
 - G2 시대와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인식의 정리 또한 필요함.
 - 동북아 해당국가들 간의 대화를 통한 안보정책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다자안보체제를 구성함.
 -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은 한반도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노력을 경주함. 즉 북한의 호전성과 자체 붕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함.

참고문헌

- 김준섭, 「기시 노부스케: 전후 일본의 우익 정치인의 원형」, 『日本研究論叢』, 2009 (제15호).
- 김호섭·이면우·한상일·이원덕, 『일본우익연구』, 도서출판 중심, 2000.
- 신정화, 「나카소네 야스히로」, 『위기를 극복한 세계의 리더들』, 북하우스, 2012.
- 장인성 엮음, 『전후 일본의 보수와 표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 최영호, 「패전 이후 우익세력의 부활과 배경」, 『일본 우익의 어제와 오늘』(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09), 동북아역사재단, 2008.
- DAVID HARVEY著, 渡辺治監訳, 森田成也・木下がや・大屋定晴・中村好孝翻訳, 『新自由主義—その歴史的展開と現在』, 株式会社 作品社, 2007.
- 古田博司, 『東アジア「反日」トライアングル』, 株式会社 文藝春秋, 2005.
- 吉見義明, 『日本軍「慰安婦」制度は何か』, 株式会社 岩波書店, 2010.
- 大下栄治, 『安部晋三と岸信介』, 株式会社 角川マガジズ, 2013.
- 渡辺治, 『安部政権と日本政治の新段階—新自由主義・軍事大国化・改憲にどう抵抗するか』, 株式会社 旬報社, 2013.

- 明石康編、『日本の立ち位置を考える』、岩波書店、2013.
- 保阪正康・東郷和彦、『日本の領土問題－北方領土、竹島、尖閣諸島』、株式会社 角川書店、2012.
- 船橋洋一編、『いま、歴史問題にどう取り組むか』、岩波書店、2001.
- 孫崎亨、『日本の国境問題－尖閣・竹島・北方領土』、筑摩書店、2012.
- 岸川毅・中野晃一共編、『グローバルな規範/ローカルな政治－民主主義の行方』 上智大学出版、2008.
- 猪野健治、『日本の左翼』、株式会社 筑魔書房、2005.
- 中野晃一、『戦後日本の国家保守主義－内務・自治官僚の軌跡』、岩波書店、2013.
- 中野晃一・上智大学21世紀CEOプログラム編、『ヤスクニとむきあう』、株式会社 めんこ、2006.
- 中曾根康弘、『中曾根康弘が語る－戦後日本外交』、新潮社、2012.
- 豊下楯彦、『「尖閣問題」とは何か』、株式会社 岩波書店、2012.
- 斎藤貴男、『安部改憲政権の正体』、株式会社 岩波書店、2013.
- 横山紘章・王雲海、『対論！日本と中国の領土問題』、株式会社 集英社、2013.

❖ 저자 약력

■ 신정화

現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2000년 日本慶応義塾大学에서 “日本の北朝鮮政策”이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함.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 日本 三重中京大学 政策学部 조교수를 역임함. 주요 논문으로는 『일본의 대북정책 1945~1992년』 오름, 2004년, 「日本・韓国・北朝鮮関係の基本構造と主要変数－冷戦期および新冷戦期を中心に」, 平岩俊一外編 『朝鮮半島と国際政治－冷戦の展開と変容』, 日本慶応義塾大学出版会, 2005년, 「일본의 대북정책의 지속과 변화」, 『일본연구논총』(30호, 2009), 「김정일 정권의 대일정책: 로동신문과 조선신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24권 1호, 2011), 「중국의 부상과 일본 안보전략의 변화」, 『국제문제연구』(12권 2호, 2012) 등임.

세계 군축비확산 동향과 동아시아의 과제

고봉준 (충남대학교 교수)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핵군축 및 비확산의 현황
3. 국제 군비현황과 이슈들
4. 군축비확산 관련 세부 이슈와 동아시아에의 함의
5. 정책적 함의

1. 들어가는 말

- 군축비확산은 21세기 들어서 재정립되어 중요성을 확대해 나가는 개념임.
 - 일반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방어력을 확충하거나 가상 적국의 군사력 사용을 억지하는 군비증강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국가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군축(arms reduction)은 기본적 방어능력 이상으로 보유하여 상대국에 위협을 주는 공격적 무기를 질적 · 양적으로 제거하여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시도임. 비확산은 다양한 형태의 군비가 이전되는 것을 막는 외교적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¹⁾
 - 21세기 안보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 것이 핵심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재의 군축비확산 노력은 주로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위협요인의 감소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분야도 있음.
- 이 글에서는 최근 군축비확산의 추이를 핵군축비확산과 국제 군비현황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향후 군축비확산의 진전과 관련하여 중요성을 지니는 세부적 이슈들을 세계, 지역, 국가별 수준에서 정리하고, 결론에서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논의할 것임.

2. 핵군축 및 비확산의 현황

- 군축비확산을 통해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사실 헤이그협약 이후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국제환경의 변화와 강대국들의 입장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도 변화해 왔다고 봐야 함. 또한 세부적인 이슈에 따라서는 국가들이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지 않기도 함.
- 핵군축 및 비확산은 21세기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핵심 이슈임. 하지만, 미국도 오바마 행정부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지는 못하였음. 예를 들어 1996년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 서명을

‘핵없는 세상’으로**대표되는 오바마****행정부의 핵군축****비확산 정책은 핵군축,****핵에너지의 평화적****사용 증진, 핵테러리즘의****예방을 통한 비확산을****목표로 하고 있음.****특히 핵군축과 NPT를****중심으로 한 확산방지가****양대 축임**

하였지만 이후 비준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비핵국가에 대해서 핵공격을 배제하는 소극적 안전보장 조치가 9·11 이후 부시 행정부에서 유예되는 방향으로 정리되면서 한동안 핵군축비확산의 동력을 만들기가 힘든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였음.

-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핵군축비확산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음. ‘핵없는 세상’으로 대표되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군축비확산 정책은 핵군축,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증진, 핵테러리즘의 예방을 통한 비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특히 핵군축과 NPT를 중심으로 한 확산방지가 양대 축임.

○ 미국 주도의 핵군축은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줌.

- 1967년에 미국은 핵전쟁에서 이기거나 충분한 억지력 확보를 위해 총 32,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했음. 이 숫자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었고, 미국은 과거에는 총 1,000회 이상의 핵무기 실험을 했으나 1992년 이후에는 더 이상 핵무기 실험을 하지 않고 있고, 새로운 탄두의 생산도 1992년 이후에는 중단하였음.³⁾

-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2018년까지 전략 무기의 상한선을 전략 핵탄두 1,550개, 실전배치 전략적 핵무기 운반수단 700개, 실전배치 및 미배치 전략적 발사 수단 800개로 설정하는 데에 동의했음. 2013년 3월 기준 러시아는 이미 부분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한 상태이고, 미국도 목표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상태임(각각 러시아: 1,480개, 492개, 900개, 미국: 1,654개, 792개, 1,028개).³⁾

- 이 협정은 전술핵무기와 예비보유량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또한 전략 폭격기는 최대 20개의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음에도 1개의 운반수단으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었다는 측면이 있지만, 군축비확산을 위한 기초를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⁴⁾

○ 비확산 또는 확산방지는 비핵국가를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는 ‘핵의 평화적 이용’ 주장과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는 사항임.

- 핵의 평화적 이용은 NPT의 3대 축 중의 하나이지만, 핵에너지를 추구(또는 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도 비확산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05년 이후 그간 핵발전소가 없던 국가 중 27개국 이상이 핵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선언함. 이들 국가의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에는 지금의 두 배 규모로 핵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국제사회에서 확산방지에 친화적인 핵연료주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 이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장치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것이 현실임.⁵⁾

-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주장에 대한 미국의 유보적 입장에서 드러나듯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권리는 기본적으로 균축비확산 이슈에서 미국과 비핵국가들의 관점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주제이며, 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문제임.
- 이러한 가운데 기존에 핵발전 시설을 가지고 있는 비핵국가들이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핵시설을 중단시키거나 무기급 핵연료를 포기하는 조치들을 잇달아 취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비확산이 서서히 진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⁶⁾
- 2012년 3월, 멕시코는 미국 및 캐나다와 맺은 핵안보 협력조치에 따라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 연구용 핵시설도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도록 바꿈.
 - 2012년 9월, 폴란드는 러시아와 미국의 협력하에 자국 오토옥에 위치한 연구용 핵시설을 고농축 우라늄 기반에서 저농축 우라늄 기반으로 바꾸는 작업을 완료함. 작업은 약 90kg의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폴란드에서 러시아로 이송하는 작업과 병행하여 진행.
 - 2013년 7월, 베트남의 달라트 핵연구시설의 35파운드의 고농축 우라늄을 제거하는 작업이 완료됨. 작업은 미국 및 러시아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베트남은 최근 4년간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한 11번째 국가가 됨. 이런 노력으로 약 135개 이상의 핵무기에서 제조 가능 핵물질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3년 6월 19일 베를린에서 행한 연설에서 러시아에 추가로 3분의 1의 핵무기를 감축하자고 제안한 상태임.
- 이에 대해서는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라는 긍정적 평가가 존재하는 반면, 그래도 남게 될 1,000여 개의 전략 핵무기는 여전히 방 어용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고 기존 핵전쟁 계획에도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함.
 - 러시아는 이에 대해 유럽 MD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핵무기만 지목하여 감축하자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며, 미국 내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에서도 이란과 북한 등 실질적 위협에 대한 대처에는 소홀히 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만 주력하는 안보 상 무리수라는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핵균축비확산이 가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향후 관찰의 대상임.

기존에 핵발전 시설을 가지고 있는 비핵국가들이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핵시설을 중단시키거나 무기급 핵연료를 포기하는 조치들을 잇달아 취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비확산이 서서히 진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미국 재정적자 문제와 국방비 감축이 군축 비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함. 왜냐하면 그 규모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재정적자는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임. 미국은 20세기 후반 이래 재정 흑자를 달성한 경험이 거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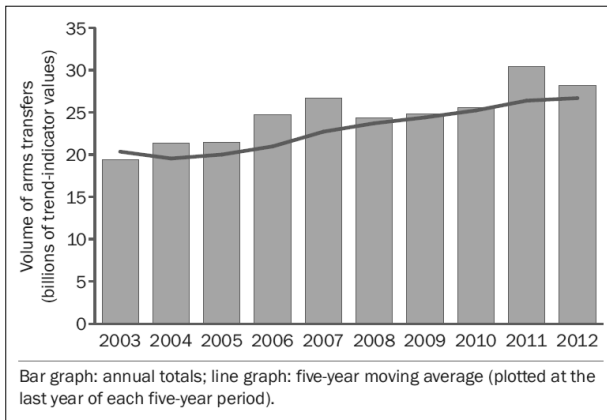
3. 국제 군비현황과 이슈들

- 냉전 종식으로 축소되던 전 세계 군비는 1998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SIPRI Yearbook 2013에 따르면 2012년에 전 세계 국방비 지출(1조 7,560억 달러)은 다시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0.4%).
 - 이는 부분적으로는 미국 국방비의 감축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미국 국방비는 2012년 실질가치 기준으로 5.6% 감소하였음(7,080억 달러). 2011년에 1% 감소한 것을 고려한다면 미국 국방비의 감소가 추세라고 판단할 수 있음.
 - 미국의 2012년 국방비는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던 해인 2001년 국방비보다 실질가치 기준으로 69%나 높은 수준이어서 최근까지 전세계 국방비 지출은 사실상 미국에 의해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음.
- 역사적으로 미국이 참전했던 전쟁 종결 이후 국방비 재조정을 시도했던 전례에 비추어 향후 미국 국방비의 감소 추세는 중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현재의 미국 국방비 재조정이 부분적으로는 연방정부 재정적자의 누적에서 기인한 점도 있다는 것이 특징임.
 - 미국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비를 제외한 국방부 예산을 2010년에는 5,340억 달러, 2011년에는 5,470억 달러로 증액.
 - 오바마 행정부의 내수 진작 우선 정책에 따라 중단기적으로 미국의 국방예산은 지난 10년간의 점증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는 힘들 것임. 2012년에 통과된 예산조정법에 따라 2012~21년 사이에 국방비를 4,870억 달러 감축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여기에 시퀘스터(자동삭감조치)에 따라 향후 10년간 추가 국방비 삭감이 불가피함.⁷⁾
- 미국 재정적자 문제와 국방비 감축이 군축비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함. 왜냐하면 그 규모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재정적자는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임.
 - 미국은 20세기 후반 이래 재정 흑자를 달성한 경험이 거의 없음.
 - 미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도 점차 감소 추세여서 미국 재정수지 악화의 의미를 현재 평가하기는 다소 이르다고 할 수 있음.⁸⁾
- 다른 한편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선진국들이 무기를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임.
 - SIPRI Yearbook 2013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00대 군수산업체 중 89개 업체가 미국, 서유럽 및 OECD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음. 따라서

서방선진국들이 여전히 무기의 생산 및 판매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전반적인 군축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임.⁹⁾

- 미국 경기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10대 무기생산업체 중 미국 회사가 8개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평균 10% 이상의 이윤을 달성했다는 점 또한 당분간 전 세계적인 무기의 생산 및 유통 추세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하고 있음.¹⁰⁾
- 무기거래량의 지속적 증가는 중장기적인 흐름임. <그림 1>에 따르면 매년 무기 거래량에는 등락이 존재하지만, 5년 평균 수치로는 지속적인 상승 추이가 관찰되고 있음.

<그림 1> The trend in transfers of major arms, 2003-2012



출처: SIPRI Yearbook 2013 Summary, p.10

미국의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경우, 결국 핵심 군수산업체들은 시장을 해외에서 확대하려는 노력을 정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할 것이며, 이는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미국의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경우, 결국 핵심 군수산업체들은 시장을 해외에서 확대하려는 노력을 정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할 것이며, 이는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만약 미국의 내수 부진이 조속히 해결된다 하더라도 미국 국방비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전환기마다 그러했듯이 미국 및 서방의 군수산업체들은 해외시장의 개척에 사활적 노력을 기울일 것임.¹¹⁾
- 이러한 이유로 동아시아 지역의 국방비는 증가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함.
- 첫째, 점증하는 국방비는 이들 국가가 현재까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
 - 둘째,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산적한 영토 및 역사와 관련한 전통적 갈등의 요인들로 인한 잠재적 군사적 충돌에 미리 대비하는 전략(hedging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대한 주장을
비확산체제 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NPT
중심의 비확산체제의
미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임**

strategy)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셋째, 2000년대 들어서 전체적으로 2배 가까이 증가된 연간 국방비 총액과 그간 누적액은 갈등 격화 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켰고,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새로 획득을 추진하는 군사적 요소들, 즉 지휘통제통신 체제의 개선, 전략전술 정보체계의 개선, 다목적 전투기, 초계기, 최신에 전투함, 잠수함, 전자전 체계, 신속대응군 등은 대부분 군사력의 해외 투사력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4. 군축비확산 관련 세부 이슈와 동아시아에의 함의

- 핵군축비확산이 그 추동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정리가 되어야 할 요소들이 존재함.
 - 우선 군축과 비확산의 정신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NPT의 재정립이 시급한 문제임. 미국은 우선 NPT의 하나의 축인 군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비확산 레짐을 세계적으로 강화하고 테러리스트 집단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획득할 가능성을 줄이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음.
 - NPT의 근본적인 한계는 이미 많은 지적을 받아온 바 있음. 특히 NPT 6조에 부여된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의무에 대해서는 분명한 시간표나 검증체계 및 의무이행 방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조약의 적용과 해석 및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관리할 상설 사무국이나 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안전조치체제의 강화에도 본질적인 한계를 보이는 것이 NPT의 실정임.¹²⁾
 - 현재까지 논의되어 온 연료임대계약, 농축 및 재처리 방지협정, 영구적 핵연료공급 방안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핵발전을 새롭게 시작하는 국가의 핵연료주기가 NPT 체제하에서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국제 비확산 노력에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이미 2010년 5월에 개최된 제8차 NPT 검토회의에서 비핵국가들은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의 구축이 NPT에 보장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한 바 있음.¹³⁾ 따라서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대한 주장을 비확산체제 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NPT 중심의 비확산체제의 미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음으로 핵군축 외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의 발효가 군축비확산의 미래를 전망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임.

- CTBT는 모든 상황에서의 핵실험을 금지시킴으로써 핵의 수평적 확산과 기존 핵보유국의 수직적 핵확산도 방지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조약임.
 - 미국 상원은 1999년에 조약 비준안을 부결시켰음. 그 이유는 조약의 검증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향후에도 미국 핵탄두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음.¹⁴⁾
 - 조약 발효를 위해 44개의 핵심국가가 비준을 해야 하는데, 현재 35개국만 비준을 한 상태이고, 미국·중국·이집트·인도·인도네시아·이란·이스라엘·북한·파키스탄 등 9개국이 비준을 유보하고 있음.
 - 근본적으로 미국의 국내 정치체제가 양극 질서를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고 있음은 CTBT 비준 전망을 그리 밝지 않게 하는 요인임.¹⁵⁾ 상원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이 없이는 비준의 전망이 불투명한데, 현재까지의 정치 상황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상원의 비준을 이끌어내는 것이 힘들 것으로 예상됨.
- 마지막으로 수직적 확산과 관련된 핵물질생산금지조약(FMCT: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의 실현 여부가 또 하나의 척도가 될 것임.
- 조약은 1993년 9월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핵국가 및 비핵국가 구별 없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의 무기용 생산을 금지하자는 제안을 함으로써 구체화됨. 이후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1998년 이후 제네바 군축회의가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함으로써 관련 협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임.¹⁶⁾
 - 부시 행정부에서는 광범위한 사찰 대상에 대한 민감성 문제 때문에 FMCT 내에서 효율적인 검증체제를 갖추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지만, 미국은 2009년 미-EU 정상회담을 통해 조약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이미 단독으로 무기용 핵분열 물질의 생산을 중단해오고 있음.
 - 이 조약도 몇 가지 한계점이 노정되어 있음. 우선 규제범위가 과거의 것은 제외되고 향후 생산분에만 적용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음. 또한 잠수함 및 연구용 원자로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은 예외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IAEA의 안전조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문제임.
 - 비핵국가들은 재고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지만, 핵보유국들은 그것이 이 조약을 핵군축 프로그램으로 만들게 된다고 우려함.¹⁷⁾ 설령 FMCT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핵보유국들의 실질적 핵군축과 무기용 핵물질 재고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한 당분간은 상징성의 차원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핵군축비확산에 현재 수준을 넘어서는 진전이 생기는 경우, 동아시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전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지역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이 점은 미국도
우려하기 때문에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
노력할 것임**

확장되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 개념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미국 이익과의 충돌을 대비하기 위해 미국은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 핵심은 지역 내에서 양자동맹을 중심으로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복합적 위협에 순발력 있게 대응한다는 것임.

- 와 한국에 주는 함의는 이중적임.
- 우선 북한의 핵전력의 위협에 직면하는 한국과 일본의 대응이 관심사가 될 것임. 이미 함상발사 토마호크 핵미사일의 퇴역이 결정된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여지의 신뢰성에 대한 질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임.
-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전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지역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이 점은 미국도 우려하기 때문에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 노력할 것임.
- 동시에 한국으로서는 그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비확산에 역행하지 않는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노골적인 핵주권론보다 실익을 챙기면서 국제적 명분을 주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한미 간에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제로 정립해야 할 것임. 특히 일본과의 형평성을 주장하기 위한 논리적·실질적 근거를 가능한 많이 확보해야 할 것임.

- 군축비확산과 관련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부정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재균형정책과 지역 내 해양영토분쟁의 존재감 증대임.
- 부상하는 중국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군사력의 질적·양적인 증강은 지역 내에서 이미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 and area denial) 능력의 과시로 표면화되고 있음. 확장되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 개념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미국 이익¹⁸⁾과의 충돌을 대비하기 위해 미국은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 핵심은 지역 내에서 양자동맹을 중심으로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복합적 위협에 순발력 있게 대응한다는 것임.¹⁹⁾
- 애초 전략적 유연성 개념은 2003년에 발표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 Global Posture Review)에서 시작되었고,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는 미군의 신속한 투사를 위해 동맹국과 어떠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가의 문제였음.²⁰⁾
- 즉 적응력과 기동력을 가진 군대의 전개와 기동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네트워크화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GPR은 사전배치의 효율성과 불필요한 전진배치의 최소화를 동시에 구현하기 위해 미군의 해외주둔을 4가지의 기능으로 구분함(전력투사중추기지: 하와이, 플로리다, 괌 등의 미국 내 기지와 영국, 호주, 일본 내의 기지/ 주요작전기지: 독일의 공군기지, 오키나와의 카데나 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전진작전기지: 싱가포르의 해군기지와 온두라스의 공군 기지/ 협력안보지역: 소규모 연락 요원 상주).²¹⁾

- 계획에 따르면 약 70,000명의 해외주둔 미군이 약 10년의 기간에 걸쳐 미국으로 돌아오고, 그 결과로 약 300개의 해외 미군기지가 축소될 예정이었음. 그런데 최근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특히 아시아와 중동에서의 충돌 억지와 안정 도모를 위한 해외 군사력 배치를 강조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주한미군을 28,000명 수준에서 유지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일깨우고 호주,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에 존재하는 미국의 해군 및 공군 기지는 해당 국가들에게 위기 시 미국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임.²³⁾
 - 최근에 재검토되는 GPR은 2012년 신국방지침의 영향으로 기지 재조정과 병력감축 및 이동의 재조정 가능성과 순환군 개념의 확장에 초점을 두고 있음.²³⁾ 그 결과로 최근까지 이뤄진 미국의 해외주둔 군사력 재배치는 원래의 계획에서 수정되어 상대적으로 아시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해상 군사력을 보다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²⁴⁾
 - 미국 군사력의 아시아 지역으로의 상대적 집중과 이에 대한 동맹국들의 대응, 그리고 중국의 전략적 이해의 확대는 향후 동아시아에서 군축비확산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유럽과는 달리 안보와 관련된 다자주의적 제도적 협력의 경험이 미미한 가운데, 지역 내에서는 해양영토와 관련된 영유권 및 관할권을 둘러싸고 국가들 간에 대립과 반복이 지속되는 상황임.
-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주권 및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당히 공격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음. 일본 역시 최근 중국과의 영토 분쟁 이후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지속하면서도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주적으로 가정한 방위태세를 계속 준비하고 있음.²⁵⁾
 - 미국은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공식적 입장을 정리한 바 있음.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원칙은 크게 분쟁의 평화적 해결, 평화와 안정, 항행의 자유, 분쟁에 있어서 중립성, 국제적 원칙의 존중임.
 - 이런 원칙적 입장에 따라 미국은 1990년대 중반에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釣魚島)와 관련해서도 어느 일방의 입장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었는데, 2010년 센카쿠 사태 이후에는 그 섬이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대상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일견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즉 최근에는 항행의 자유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등 미국이 공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원칙들 이외에 중국 견제라는 제 3의 요인의 중요성이 증대된 상황임.

미국 군사력의 아시아 지역으로의 상대적 집중과 이에 대한 동맹국들의 대응, 그리고 중국의 전략적 이해의 확대는 향후 동아시아에서 군축 비확산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일본이 주변 국가들과
해양영토와 관련한
갈등과 대립을 반복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이 수세적 상황
으로 몰리는 것 아닌가
하는 국내적 우려가
있음. 즉 보통 국가가
아닌 일본을 다른
국가들이 마음대로
몰아 붙이고 있다는
것임**

- 미국 상원도 2012년 11월 29일에 2013년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3)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은 센카쿠 열도의 궁극적 주권에 대해서는 입장을 취하지 않지만 섬에 대한 일본의 행정관할권(administration of Japan)과 일본 관할지역의 방어를 위한 미국의 개입을 확인한 바 있음.²⁶⁾
- 해양영토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는 국가 간 대립이 아니라 자칫 동맹국을 포함한 주체의 확대로 이어져 지역 차원의 군사적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센카쿠에 대해 미국이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관심 사항이 되어버렸음. 전체적으로 이러한 우려와 고민의 존재는 군축비 확산의 동아시아에서의 진전의 전망을 흐리게 함.
- 아울러 일본과 중국의 개별적인 움직임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하는 사항임. 특히 최근 일본이 해양영토와 관련하여 복합적 현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이 주변 국가들과 해양영토와 관련한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이 수세적 상황으로 몰리는 것 아닌가 하는 국내적 우려가 있음. 즉 보통 국가가 아닌 일본을 다른 국가들이 마음대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임.
-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재임시절 일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방영토를 방문하였고, 2010년 9월 센카쿠에서의 중일 충돌 사태가 일본이 굴복하는 모양으로 정리되면서 일본 내의 이러한 우려는 상당한 정도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황임.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음.
- 문제는 여기서 비롯되는 국내적인 분노와 좌절감이 민족주의적으로 고양되어 일본의 군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임. 새로 등장한 아베 정권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아베 정권은 2010년 민주당 정권이 만든 방위계획대강을 수정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마련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 그 핵심 중 하나는 도서방위력 증강 예산 등 국방력 강화인데, 일본은 2013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11년 만에 증액시켰음(연합뉴스 13/01/24).
- 이러한 일본의 행동은 미국의 지원 하에 당분간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군축비확산보다는 군비증강의 주체로 행동하게 될 것임을 시사함.
- 중국의 경우는 주변 상황과는 상관없이 단계적으로 군비를 증강해오고 있음.
-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와 개조한 항모 바랴그함을 2012년에 랴오닝으로 명명하여 취역시켰고, 자체 항공모함 제작에도 이미 착수하였음.

-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사정거리 7,400km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쉬량(巨浪·JL)-2를 장착하는 신형 진(晋)급 SSBN을 2년 내에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됨. 2세대 상(商)급 핵추진 공격잠수함(SSN) 2정은 이미 취역 중이고 3세대 SSN 5정이 수년 내 추가될 것임. 아울러 중국은 장거리 감시·정찰 능력도 개선하고 있음.
- 해군은 조기경보기와 무인기 등으로 서태평양 지역까지 감시와 정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중국 하이난 섬 남단 야룡(亞龍)만의 새 해군기지가 완공되었음. 이 기지는 핵추진 공격 및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항공모함 등 수상전투함정을 수용할 수 있음.
- 중국도 지역 내에서 군축비확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5. 정책적 함의

- 군축비확산은 일종의 공공재 성격을 띠지만, 최근에는 정책적으로는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측면이 큼. 국제적 현황과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두 측면을 고려할 때,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국제적 규범에의 원칙적 동조와 협력이란 관점이 가능함. 둘째,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우선 고려점이 될 수 있음. 셋째, 정책적 손익을 계산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가능할 것임. 물론 이 세 가지 관점은 분리되어서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고, 세 가지 관점이 반드시 서로 배타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아님.
 - 미국의 입장에서 군축비확산이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임. 우리 입장에서 군축비확산을 지나치게 외교적 입장에 경도된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우, 안보를 위한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경시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
 - 군축비확산과 관련하여 복합적 이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한국으로서는 안보상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이슈를 선점하여 주도하는 네트워킹을 하는 한편,²⁷⁾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군축비확산 이슈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단/중/장기적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35조 4천억 원의 2013년 국방예산 요구안에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전면적 도발 가능성 등 안보상의 위협요인에 대한 강조는 보이지만, 군축비확산이란 시대적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나타나 있지 않음.
 - 군축비확산 이슈는 군사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국방정책의

**군축비확산과 관련하여
복합적 이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한국으로서는
안보상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이슈를
선점하여 주도하는
네트워킹을 하는
한편,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군축비확산
이슈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단 / 중 /
장기적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현재 필요한 것은**외교와 국방이 망라된****전략적 관점에서****군축비확산과 관련된****동아시아와 한국의****기회와 도전을****객관적으로****파악하는 것임**

하위개념이며 국방정책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미국은 1961년부터 군비통제국(ACDA: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을 설립하여 국무부, 국방부, CIA 등 관련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통제해 왔음. 이는 1997년에 있었던 프로그램 개혁을 통해 국무부로 통합되었고, 2006년의 구조조정을 통해 군축 업무는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 산하로 정리되었음.²⁸⁾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도 국방정책의 하위개념의 성격이 강하여 관련부서도 국방부 군비통제실이 대표적임.

- 현실적으로 미국은 국방전략과 군축비확산 정책을 병행 추구하고 있기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와 국방부의 효율적 정책조정이 필요함. 그러나 현 국가안보 기획체제에서 군축비확산의 문제는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며, 관련 전문가의 풀도 제대로 구축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다양한 전문가의 시각을 통한 복합적 문제 인식이 이뤄지지 않으면 군축비확산의 흐름에 수동적으로 끌려가 효율적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 또한 군축비확산과 관련한 다양한 시각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슈에 대한 조기 인지 종료(premature cognitive closure) 및 근원귀속 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theorem)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믿음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게 됨.
- 현재 필요한 것은 외교와 국방이 망라된 전략적 관점에서 군축비확산과 관련된 동아시아와 한국의 기회와 도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전문가의 양성과 토론의 활성화가 중요함.
 - 다른 한편으로 군축비확산을 안보의 증진 또는 외교력의 발휘라는 고정된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이슈가 연결된 복합 네트워크로 바라보는 시각의 도입이 필요함.

주석

- 1) 외교통상부, 『군축·비확산 편람』(서울: 외교통상부, 2007), p.4.
- 2) Robert S. Norris and Hans M. Kristensen, “U.S. Nuclear Warheads, 1945-2009,”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65, No.4(July/August 2009), p.73.
- 3) “New START Treaty Aggregate Numbers of Strategic Offensive Arms,” Bureau of Arms Control, Verification and Compliance(April 3, 2013).
- 4) 이외 미국은 B-61 3/4 폭탄으로 구성된 200개의 전술핵무기와 예비탄두 2,650개 및 해체 예정인 3,300개의 탄두 등 2013년 현재 총 7,7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전술핵무기 보유량은 없고, 약 2,700여 개의 예비탄두와 4,000여 개의 해체 대기 탄두 등 총 8,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69의 “Nuclear Notebook” 시리즈를 참고할 것.
- 5) Sharon Squassoni, “Nuclear Energy Enthusiasm: The Proliferation Implications,” *JPI PeaceNet*, 2010-07, Jeju Peace Institute(2010).
- 6)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는 Global Security Newswire 홈페이지의 “Mexico Declared Free of Weapon-Grade Uranium,” “Polish Reactor Modified to Stop Using Weapon-Grade Uranium,” “Vietnam Relinquishes Final Highly Enriched Uranium” 기사 참조.
- 7) 당장 2013년 9월까지 국방비 420억 달러의 삭감이 불가피하다.
- 8) 피터 W. 싱어, “강제몰수에 따른 국방비 삭감이 미 군사력, 아시아 및 한반도에 미칠 영향,” EAI Issue Briefing No.2012-01.
- 9) “Companies in the SIPRI Top 100 for 2011, by country,” *SIPRI Yearbook 2013 Summary*, p.9.
- 10) “The 10 largest arms-producing companies, 2011,” *SIPRI Yearbook 2013 Summary*, p.9.
- 11) 최근 한국의 차세대전투기 사업을 둘러싼 3개 회사의 치열한 경쟁이 하나의 사례이다.
- 12) 백진현, “핵확산 금지조약(NPT)의 성과와 한계,” 『핵비확산 체제의 위기와 한국』(오름, 2010).
- 13) 박재적, “새로운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 핵비확산 체제의 위기?” 배정호·구재희 편, 『NPT 체제와 핵안보』(통일연구원, 2010).
- 14) Robert Nelson, “3 Reasons Why the U.S. Senate Should Ratify the Test Ban Treaty,”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65, No.2(March/April 2009), p.52.
- 15) Jeffrey Lewis, “The NPT Review Conference 2010: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U.S.” *JPI PeaceNet*, 2010-09, Jeju Peace Institute(2010).
- 16) 류광철·이상화·이갑수, 『외교 현장에서 만나는 군축과 비확산의 세계』(서울: 평민사, 2005), pp.424-425.
- 17) 이병욱, “핵물질 규제 현실과 문제점,” 『핵비확산 체제의 위기와 한국』(오름,

- 2010).
- 18)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189(November 2011).
 - 19) U.S. Joint Chiefs of Staff,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defining America’s Military Leadership*, February 2011.
 - 20) 이근,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과 한미동맹의 미래,” 『국가전략』 제11 권 2호(2005), p.17.
 - 21) Michael O’Hanlon, *Unfinished Business: U.S. Overseas Military Presence in the 21st Century*(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08), pp.11-12.
 - 22) Michele Flournoy and Janine Davison, “Obama’s New Global Posture: The Logic of U.S. Foreign Deployments,” *Foreign Affairs*, vol.91, no.4(2012), p.3.
 - 23) 대표적으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괄 이전 사업은 지역 내의 반대와 비용 부담 등의 이유 때문에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고, 향후 근본적인 재조정이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Alex Frangos, “Plan to Shift U.S. Forces in Pacific Hits Speed Bumps on Guam,” *Wall Street Journal*(Jan. 10, 2013) 참조.
 - 24) 신성호, “미국의 아시아 귀환과 동북아 정세,” *IRI Policy Brief*, No.6(2012년 2월), pp.6-7.
 - 25) 사례로 2000년부터 실시되던 오리엔트 실드(Orient Shield) 미일 양국 지상군 합동 훈련은 최근에는 미국 하와이 주둔 스트라이커(Stryker) 장갑차가 참가하여 전술작전 훈련을 함께 실시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는 전술적 수준에서 양국 군대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참여 규모는 작지만 이 훈련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을 상징하는 것으로 미군 당국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Donna Miles, “Orient Shield Promotes U.S.-Japan Readiness, Interoperability,” <http://www.defense.gov/news/newsarticle.aspx?id=118326>.
 - 26) Michael J. Green and Nicholas Szechenyi, “U.S.-Japan Relations: Meet the New Boss/Same as the Old Boss?” *Comparative Connections*(January 2013).
 - 27)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이러한 사례로 볼 수 있으나, 하나의 의제에 수년간의 국력을 집중시키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역 및 세계 차원에서 논의하여 실행할 수 있는 의제를 다각도로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 28) 군축·국제안보 차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state.gov/t/>

❖ 저자 약력

■ 고봉준

現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부원장 겸 군사학과장. 미국 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연구 분야는 국제안보 및 미국외교안보 정책임. 최근 연구로는 “핵비확산과 네트워크 세계정치”(국제정치논총, 2011),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과 미국”(민족연구, 2013), “동아시아 망제정치: 21세기 미국의 군사안보 네트워크 전략”(평화학연구, 2013) 등이 있음. bjko@cnu.ac.kr

JPI정책포럼 현황

- 주철기·진행남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No. 2013-11)
- 유현석·이성우·김성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구상』
(No. 2013-10/12)
- 진행남·한인택·황일도 『북핵과 한반도 평화』 (No. 2013-06/07/08)
- 제성훈 『3기 푸틴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결정요인, 평가, 전망』
(No. 2013-05)
- 이춘복 『북한 3차 핵실험 후 중국의 대응과 북중관계: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은 진화하고 있는가』 (No. 2013-04)
- 진행남 『중견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방안: 한국의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No. 2013-03)
- 서승원 『일본의 대외전략을 다시 묻다: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한중일 트라이앵글 속의
한국』 (No. 2013-02)
- 이성우 『사회과학 관련 싱크탱크의 역할: 무엇이 싱크탱크를 강하게
하는가?』 (No. 2013-01)
- 이승주 『미중 경쟁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통상정책을 중심으로』
(No. 2012-18)
- 박종철 『귀국자를 통해서 본 북한사회』 (No. 2012-17)
- 이규창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성과와 과제』 (No. 2012-16)
- 송영훈 『해외탈북이주 현상의 현황과 쟁점』 (No. 2012-15)

- **흐람치힌 알렉산드르 아나톨리에비치 · 이성우**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과 남북한관계』 (No. 2012-14)
- **장노순** 『사이버 무기와 국제안보』 (No. 2012-13)
- **조성권** 『초국가적 위협: 테러, 마약, 범죄조직의 상호 연계』 (No. 2012-12)
- **윤태영** 『한국 안보 위기관리체계 및 전략의 발전방향』 (No. 2012-11)
- **박영준**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현황과 다자간 해양협력방안』 (No. 2012-10)
- **김장현** 『한류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방안』 (No. 2012-09)
- **홍승목** 『UN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제안 12개조』 (No. 2012-08)
- **김진호** 『중국 정치 구조와 18대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지도자 그룹』 (No. 2012-07)
- **김상배** 『네트워크로 보는 세계정치의 변화: 사이버 안보와 디지털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No. 2012-06)
- **유호근** 『식량안보와 한국: 과제와 전망』 (No. 2012-05)
- **진행남** 『이어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No. 2012-04)
- **진행남 · 오병호**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조성 방안』 (No. 2012-03)
- **정성장** 『북한 김정은의 실제 영향력, 지도체제의 성격과 핵심 파워 엘리트』 (No. 2012-02)
- **장준영** 『미얀마의 개혁개방: 원인과 전망』 (No. 2012-0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